

월/요/광/장

장병완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도 국고사업 예산 상당부분을 10%에서 30%까지 하향 조정하여 기획재정부로 넘겼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광양항 건설사업, 여수 엑스포 국고지원 사업 등 예산 증액이 절실한 지역 현안사업들의 예산을 기대만큼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려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적극 대응을 주장하는 지적은 너무도 지당한 말이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있다. 한 방에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는지 필자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예산 확보에 '왕도(王道)'가 있을 수 없고 철저한 논리와 끈질긴 설득만이 가장 유효한 예산 확보 방법이라는 것을 오

랜 기간 재정운용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확보는 전쟁과도 같다. 법률로 확정되어 있는 자출 소요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소위 '가용재원'은 극히 제한되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각 부처의 역점 사업,

예산 확보의 '왕도(王道)'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들을 총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초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폭등을 위시한 대외 경제 여건이 쉽게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세입은 감소하고 재정 지출 수효는 급증하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예산 확보에 안간힘을 써야 하는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에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한 후 예산 확보에 임하는 자세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예산의 형식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

리고 기금은 각각 특성이 있고, 지자체가 추진하고 싶어하는 사업과 중앙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려는 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각 사업마다 예산지원 여부의 결정권한을 어느 기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지자체가 이러 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꼭 지원해 달라고 주장만 하면, 결과는 일반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감정의 대립만 깊어지기 십상이다.

왕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는 몇가지 유의점을 언급해 보자. 첫째,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무부처 및 예산 당국을 설득하는 과정 현안 중앙정부의 국고사업 지원 방향에 맞추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원을 축소하려는 사업, 예를 들어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을 들고 가서 아무리 요구해 봐도 반영되기 어렵다.

둘째,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사업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형평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타 지원 사례가 있을 경우 동일·유사한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셋째, 예산 편성은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시기에만 예산에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지자체, 각 주무부처, 예산당국, 정당, 국회 등 예산의 요구에서 최종 확정단계에까지 어떤 부분은 행정적 논리로, 어떤 부분은 정치적 논리로 설득하는 유연하고 끈질긴 자세가 필요하다.

끝으로,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위 실세나 최고 책임자에 우선하여 실무 책임자에게 대한 설득의 중요성이다. 각 사업에 대해 가장 세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뒷전에서 배려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명성이 강조되는 현대 행정의 관점이나 예산을 통과하지 못하고 본선에 진출할 수 없는 운동 경기의 룰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을 위한 광주·전남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해 적절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국고예산 확보에 특별한 왕도는 없고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호남대학교 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생태계 파괴 외래식물 퇴치 대책 서둘러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 식물들이 광주 도심까지 파고들고 있다고 한다. 특히 광주의 명산인 무등산의 저지대에는 생대 교란 외래식물이 무성하고 제석산, 양림산 등 도심 야산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생태교란 식물은 생태계 교란을 결국 사람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재앙이라 할 수 있다. 생태계 교란 피해액이 세계적으로 이미 수 천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생태계 교란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산하가 생태교란 외래종에 의해 점령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외래식물에 대한 대책은 환경·농산림청과 함께 부분적 제거에 나섰고 있는 게 고작이다. 이런 안이한 대응으로는 외래식물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외래식물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근절시키고 토종식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광주 도심지역 야산 역시 생태교란 식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남구 제석산과 양림산, 보석산 등 야산 곳곳에 꽤

이런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중대한 문제를 촉구했다. 북한은 현직조사 거부

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는 우리측 인원

에 대한 신체 불가침을 보장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할지를 밝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

'금강산 총격 피살'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부가 어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의 핵심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에 진상규명의 협조를 촉구했다. 통일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설명한 사건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

다.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박씨 피살사건은 의혹투성이다. 이동경로와 행적 등 진상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박씨의 이동거리다. 북측의 설명대로라면 박씨는 20분만에 최소한 3천m 정도를 이동했다는 계산이다. 50대 여성이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백사장을 그만큼 걸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정부는 박씨의 부검 결과와 현장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의 윤곽을 따져볼 예정이지만 북한의 협조가 없으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피살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우리의 현지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중대한 문제를 촉구했다. 북한은 현직조사 거부

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는 우리측 인원

에 대한 신체 불가침을 보장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할지를 밝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

법조 칼럼

문준필



우리나라도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선진국으로 보아 줄 것인가. 필자는 일본 해외연수 생활을 경험했다. 1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은 과연 선진국이라는 것을 뼈 속 깊이 느끼고 돌아왔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원칙이 지배하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필자는 출국 몇 해 전 오른쪽 눈에 망막박리 증(눈 속의 망막이 떨어져 실명

송범에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이었고, 대학교 다닐 때 본 모의재판과 똑같았다. 즉, 검사가 수사기록 별로 중요 문단을 일일이 읽고 피고인의 확인을 듣고, 흥기를 직접 피고인 앞에 제시하면서 2시간을 진행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어떤가? 하루 50~70건을 처리하고, 자백하는 사건은 약 3~5분, 다무는 사건은 10분 정도 밖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두 가지 사례는 전혀 다른 영역의 것이지만, 일본 사회는 이미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 준다. 의사는 "교과서대로 양쪽 눈을 다 검사해야 한다"는 원칙, 판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

하는 병)이 생겨 큰 수술을 받고, 6개월에 1만번 정기검진을 받아 오던 터였다. 일본 생활 중 동경여자의과대학 안과에 갔다. 서툰 일본어로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다는 말을 했는데, 일본인 의사는 왼쪽 눈을 검사했다. 그 의사는 "망막박리 증이 있는 환자는 다른 한쪽 눈도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검사결과 그 초기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레이저 시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 한 번도 검사하지 아니한 왼쪽 눈. 며칠 후 간단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고, 그 후 귀국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일본 해외연수 중에는 재판소(일본에서는 법원을 재판소라고 한다)에서 2개월간 재판진행, 재판관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는 기회가 제공된다. 형사재판을 방청하면서 받은 충격은 대단했다. 자백 사건인데, 진짜 형사소

다"는 원칙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내 법원에서 민사재판에서 '구술 변론주의',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내세워 재판절차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쉬운 말로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법조인 사이에서는 이미 편법에 익숙해 버려 반발이 많다. 법조인이 법대로 하자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분야는 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거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 밍이 헌법이나 법률 위에 있고, 원칙이 사라진 지 오래며, 준법행위를 노동쟁의로 하면 법집행이 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한다.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그것이 모든 분야로 확대될 때 우리도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 즉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기고

김영주



정말 답다. 답지 않은 여류가 있을까만 열리는 일이 많아서 금년에는 유난히 답다. 150달러를 넘보던 유가가 며칠 내리더니 다시 급등했다. 에너지·곡물 파동으로 모든 원자재·사료 가격이 폭등하고 연쇄적으로 공산품·식음료·서비스요금도 뒤따르고 있다. 치솟는 기온에, 치솟는 물가에, 치솟는 분기에 이래저래 풀한 여름 나기는 틀렸다. 지난 9일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가 "기후변화를 막자"는 총론에 합의하는 날, 우리나라의 하루 전력수요가 11개월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바로 우리 가정과 기업, 국가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950억 달

과 재생에너지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꾸고, 기업과 민간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도 만들었다. 나아가 작년 12월 '환경문제 해결책'으로서의 정책, 그린 IT(이슈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강점인 제조업과 환경·에너지 절약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사회, 국민생활의 모든 면에서 IT를 매개로 한 개혁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늦추거나 놓쳐서는 안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최우선 과제다. 이에 광주·전남은 앞장서 에너지산업 클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광주의 미래다

러스터 조성에 나서야 한다. 한국전력이나주의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해 오면 기존 에너지의 가장 큰 역량이 지역예동지를 든다. 더하여 풍력·태양력·지력·조력·수력·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지리적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환경이란 화두에도 공리가 깊고 역량이 쌓였다. 이런 조건들과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u-에너지', 'u-환경'으로 특화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 마침 광주시가 '2014년 세계 수소 에너지 대회(WHEC: World Hydrogen Energy Conference)' 개최지로 확정됐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미래 에너지 선도 도시로 재조명 받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사회보육 시스템 미비 '기러기 할아버지' 양산

'기러기 할아버지'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라고 한다. 이는 할머니인 아내가 손자, 손녀 양육을 위해 맞벌이하는 자식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집을 비워 홀로 남게 되는 남자노인을 일컫는 말이다. 아이들 과열 교육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가 빚어낸 신 세태가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와 맞물려 이런 용어를 만들어낸 듯하다. 한 사회단체가 조사한 내용인데 맞벌이 직장인의 29%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러기 할아버지'가 요즘 적응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남자 노인들은 대체로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약화와 경제적 어

려움, 은퇴 후의 급격한 상실감 등으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가다가 '기러기 할아버지' 신세가 돼버렸으니 그 외로움과 불면증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해 본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기러기 할아버지들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맞벌이 부부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방과후 교실을 확대해 아이들이 할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송은숙·광주시 북구 동향동

無等鼓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전 영국 총리의 말이 다. 통계의 함정을 지적한 명언이다. 스탈린이 남긴 말도 유명하다. "한 사람이 죽으면 비극이지만 100만명이 죽으면 통계다."

도박장만큼 통계의 유용성이 적용되는 데도 드물다. 만약 도박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있다면 만능의 도박꾼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도박은 수많은 통계에 따른 거대한 확률이론의 실험장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도박과 관련된 통계도 불투명, 불확실의 연속이다.

"인생은 도박"이라고 했던 파스칼은 "도박을 즐기는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하여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한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은 확실히 매력적이다. 인생은 확률게임의 연속이다. 정치와 난자의 수정이란 출생의 기원부터가 확률의 결과다. 로또 당첨을 바라는 것도 일종의 희소한 확률에 대한 기대다. 유

교의 고전인 '주역'도 결국 삶의 확률을 집대성한 책이다. 영국의 대중지 '미러'는 최근 과학자들이 조사한 죽음의 확률을 게재했다. 물론 영국이나 유럽의 사례가 근거가 됐다. 상어에 물려죽을 확률은 3억분의 1, 코코넛에 맞아죽을 확률은 2억5천만분의 1,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은 1억분의 1, 참대에서 떨어져 죽을 확률은 200

만분의 1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를 치열한 논란으로 몰아간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은 정확히 얼마일까. 미국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로 인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40억분의 1이라고 한다. 로또에 당첨되어 상금을 타러가다가 버

락에 맞아 죽을 확률과 같거나, 락을 먹고 죽을 확률이 광우병보다 4만배 더 위험하고, 담배를 피웠을 때는 430만배 더 위험하다는 비교도 동원됐다. 그러나 수억, 수백만분의 1인을 어쩌리, 그 미세한 확률이 막상 자신에게 닥치면 확률 100%인데, /오주승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광우병 확률



고기 정량 속이는 음식점 여전...양심 지켜야

며칠 전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경악했다.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식당에서 흔히 먹는 고기의 양이 과연 적절한지, 속임은 없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사실 고기를 먹으러 식당에 갈 때마다 "과연 우리는 속지 않고 돈을 낸 만큼 제대로 받는 걸까"하는 의문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저울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한 뒤 반찬이 올라와 있는 식탁 옆에서 고기의 정량을 측정해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 마번 "맛껏거니"하면서 지내왔다. 그런데 이날 TV에서 보도한 내용은 대부

분의 고깃집에서 양을 제대로 넣지 않고 속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믿고 먹었던 고기의 정량이 가격과 달리 턱없이 부족하니 화가 났다. 특히 더 기가 막힌 것은 후안무치한 식당 주인들의 태도였다. 업주는 "대한민국 어느 식당인데 거기에 가서 달아봐라. 정확하게 100% 딱 맞는 게 어디 있나?"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고기를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정량을 달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양심적 변화가 이런 데서부터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1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善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가11)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6	이론제작부 2200-628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 회 1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사 회 2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